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라 미 경

내용목차

1. 서론
2. 방위산업의 이론적 고찰
3. 방위산업구조의 실태 및 문제점
4.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5. 결론

1†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교신저자 Tel: 010-3307-2311 E-mail: mkra33@sch.ac.kr)

논문접수일: 2013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7일

논문수정일: (1차: 2013년 11월 15일, 2차: 2013년 12월 13일)

A Study on Establishing Governance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mpetitive Power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Ra, Mi Kyoung^{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and problems faced by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and to suggest desirable plans for establishing sustainable governance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mpetitive power of such industry.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agenda aims to transform the defense industry into "a new creative economic player"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Governance has become a new method of administration to form a new order and to create changes in politics, the economy,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society through coordination, control, and regulation.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maintains the structure of system integrators focused on developing platforms for the armed forces, components and parts suppliers, system-centered R&D, and founding structure. Consequently,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lacks the capabilities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a core technology. Establishing governance for R&D and structural reformation is a requisite measure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Keywords: *Defense industry, sustainable governance, defense export, R&D*

1. 서론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창조경제가 강조되고 있다. 창조경제란 창조력과 상상력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실천력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 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국방과학기술을 전제로 하는 방위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산업경제적 차원에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시킴으로써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인력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위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국방과학기술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전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초고속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현대사회의 일상생활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적인 안보환경도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안보의 틀을 벗어나 인간안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 경제·안보의 환경 변화는 국제방산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의 지속은 여러 국가의 국방비 감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안정적 기반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형태의 다양화,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을 통한 수출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방산수출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국제 방산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산업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최근 국방과학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관련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방산업을 육성할 장기비전을 설정, 2015년까지 세계 제8대 국방R&D산업 강국으로의 부상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기반을 구성하는 업체는 내수기반의 한계와 경쟁의 심화로 인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수출을 통한 활로 모색도 독점적 국제시장과 환경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국방산업이 지역 및 국가발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한국은 방산시장 개척과 방산물자수출 확대를 위한 구조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 방산수출은 국가위상과 직결되어 있어 방산진흥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곧 국가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법제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군사력 건설을 위해 자주국방의 기초인 국산무기체계 구축과 핵심 무기장비의 연구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및 국가발전의 의미에서 대전·충청권은 계룡대, 자운대, 연무대, 성무대,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민간기업연구소, 대덕과학 비즈니스벨트 등 국방과학 도시로서의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전·충청권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지리적·공간적 여건과 산업인프라 기반에 맞는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¹⁾

1)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사회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 둘째, 개방체제로 인하여 정부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부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셋째, 정부가 다루어야 할 사회쟁점이 복잡하게 노정되어 공공정책결정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많은 거버넌스가 다루어야 할 사회쟁점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다섯째, 정부는 주요한 사회쟁점을 다루는 유일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여섯째, 정부와 사회 상호작용의 전통적인 또는 새로운 모형은 이들 사회쟁점을 다루는데 필요하다. 일곱째, 거버넌스의 배열과 기제는 사회수준이나 부문마다 다르다(Kennis & Schneider 1991: 33-37; Kooiman 2002: 75).

네트워크로서의 성공모델을 제시 것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은 민간기술과의 상호교류·보완과정이 필수적이며, 분야별로 융·복합 기술형태를 띠는 특성으로 전략적인 산업연계 지식·정보화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긴요한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민·군은 상호간 연계가 부족하며, 서로가 무엇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실정인 바, 방위산업 기반구축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방위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전·충청권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방위산업의 이론적 고찰

2.1 방위산업의 개념 및 특성

방위산업의 개념²⁾은 매우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쓰고 있는 군수산업, 병기산업, 전쟁산업 등이 있다. 이렇게 방위산업의 유사용어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각각 그것의 사용자가 설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군사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어를 목적으로 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연구,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종사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국방백서 2006).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위산업을 방위산업물자를 생산(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정비, 재생, 개량, 개조)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방위사업법 제3조8항). 여기에서 방위산업의 제품을 방산물자라고 하는데 협의의 개념으로 방산물자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탄약·함정·비행기·전자기기·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 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군수물자까지도 포함된다.

방위산업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11). 하나는 군의 무기체계 획득과 방위산업이 국방 고유목적에만 충실한 것인가라는 ‘경제적 조달 우선론’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고려할 것인가라는 ‘국내 방산조달 우선론’이 있다.

경제적 조달 우선론은 유사시 국가행위의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비효율적인 국내 방산기술기반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무기체계의 국제적인 상호의존

2) 해외 학자들의 경우도 방위산업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위산업을 “정부 및 민간 소유시설을 운용하여 육·해·공군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주계약업자, 하청업자, 부품공급업자로 구성하며, 특히 군수품을 확실하게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전시 및 비상시 급속한 확장능력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방위산업을 “군사용 물자에 대한 연구, 개발, 생산, 분석, 정비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체 및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HCP 1986). 일본은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한 무기,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것을 방위산업이라고 명시하고 방위생산에 관여하는 업체를 총칭”하여 방위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군사외교 및 국제군수협력을 통하여 유사시를 대비한다. 현대전은 현존 전력으로 싸우는 것이며 전시에는 방산시설의 파괴 위험성이 크므로 국내 생산을 통한 전쟁지속력의 증가는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방위산업에 투입되는 국가자원을 타부분에 활용할 경우 방위산업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방산조달 우선론은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발전시키면 유사시 국가행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국내 방산기반을 유지할 경우 유사시 평시에 무기를 공급받던 국가의 수출금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국내 개발·생산을 통하여 무기를 획득할 경우, 자국군의 특수한 소요를 반영하기가 용이하며 해외무기체계 도입시 협상력은 국내개발시의 잠재비용에 좌우되므로 국내방산기술은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경제적 조달 우선론과 국내방산조달 우선론은 매우 상이한 관점을 갖고 있으나 이 중 어느 것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분야별 어떤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방위산업의 특성으로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방위산업은 정부를 유일한 수요자로 하는 수요 독점적 시장형태를 취하므로 일반산업에 비해 시장성이 제약되어 있다.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어느 쪽이 제약요인을 더 많이 갖게 되는지 또는 어느 쪽이 비대칭적인 정보를 많이 갖는가에 따라 상대적인 협상력이 달라진다. 쌍방 독점 하에서는 시장 기능의 비활성화로 인해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둘째, 방위산업은 일반산업처럼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를 두는 경쟁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체산의 특성이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산물자 및 용역에 대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보다는 계약가격 또는 실제 발생원가에 대한 원가보상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법령을 통해 원가 계산에 대한 절차와 범위가 정해져 있다.

셋째, 방위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대부분의 방위산업은 제품 특성상 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해 대규모 초기 자본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생산 확장 능력에 대비하여 투자된 고정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설비투자를 수반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이는 신규기업이 방위산업으로 진입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넷째, 방위산업은 무기생산과 개발에 있어서 최종 가치는 군사적인 요구 충족여부에 있으므로 경제성보다는 무기의 신뢰성이 강조된다.

2.2 세계 방위산업의 환경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은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과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을 포함한 선진 방산업체들은 1990년대부터 방산인력 및 생산량 감축, 국내외 동종업체간 전략적 제휴 등 실질적인 방산 구조조정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다.

이들 국가들은 M&A를 통해 대형화·다각화된 방위산업체, 소위 주체계통합업체(Lead System Integrators: LSIs)가 연구개발, 생산, 군수지원 등 무기체계 ‘총수명주기체계관리(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TLCSM)를 담당하는 업체중심의 방위산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형화·다각화된 방산업체를 통해 연구개발, 생산, 성능개량 및 정비 등 무기체계의 전수명주기 동안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활동을 담당하도록 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로 탄생한 대표적인 대형방산업체들이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미국), 보잉(Boeing, 미국), 비에이이 시스템(BAE Systems, 영국), 노드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미국), 레이시온(Raytheon, 미국), 이에이디에스(EADS, 프랑스, 독일, 스페인), 유에이씨(UAC, 러시아) 등이다.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은 21세기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미래 작전환경이 새로운 전장환경인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NCW)하에서 효과기반작전(Effects-Based Operation: EBO)으로 변화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무기체계 및 장비 그리고 물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효과기반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공중·지상·해상, 육·해·공군과 같은 기능이나 군 분류에 상관없이 작전효과와 소요에 요구되는 시스템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업체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종하 2010).

결국 세계 방위산업의 구조조정은 현재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방산 M&A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핑계로 자국의 방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미래 방산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외생산기지 확보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2.3 방산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거버넌스란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 정의하고 있다(Kooiman and Vliet 1993: 64). 이러한 거버넌스는 논의의 초점을 시민사회에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논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전 인류를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집단을 포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다차원적으로 산재해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의 시민 참여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적 거버넌스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방적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의 통치가 아닌 시민, 연구소, 시민단체, 정부, 시장, 언론 등이 지역사회의 공동문제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공유하며, 지역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 이를 통해 공공재를 개발하는 일련이 과정을 제공하는 방식의 거버넌스 방식이 작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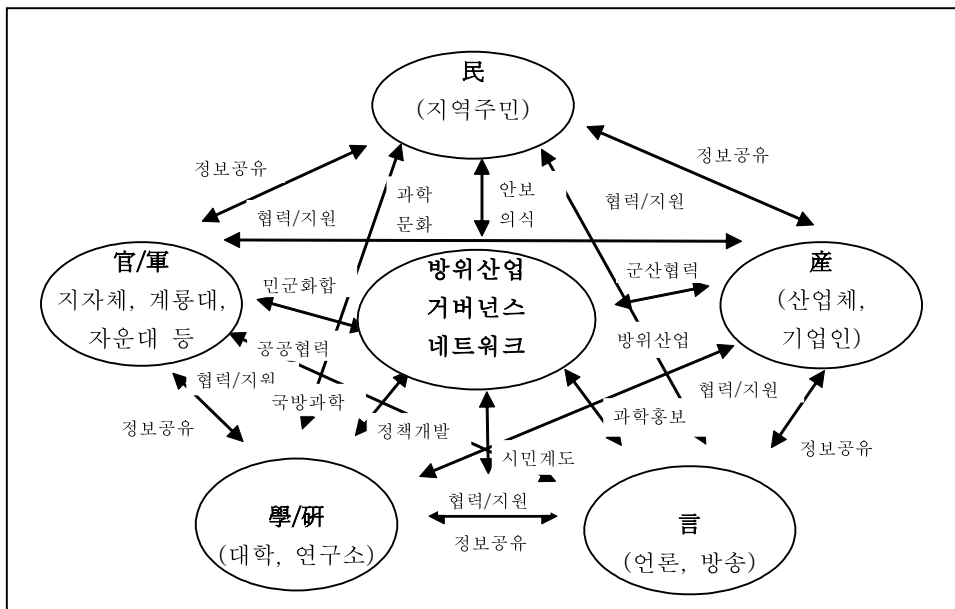
특히 대전·충청권은 3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대를 중심으로 자운대, 군수사령부, ADD, 논산의 연무대, 청주의 공사와 제17 전투비행단이 인접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공급 양과 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에서 조력자의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가 요청되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관련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국방 R&D 분야와 연계된 산업기반과 인적자원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버넌스는 행위

주체들(과학기술연구소, 국방, 자치자치단체, 방위산업체, 대학, 지역주민)에 대한 학습조직화 및 지식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전·충청권을 국방산업 인재육성 관련 혁신체제로 특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전·충청권의 방위산업 분야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민과 군 그리고 산과 연이 서로간의 협력·연계를 통해 혁신역량과 지역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국방산업의 육성과 국가 경쟁력 향상이 선순환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림1>에 나타나듯이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민·관·군·산·학·연·언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자생(自生)모델”로서 방위산업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길병옥·최병학 2007)

이를 통해 한국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방연구개발 경쟁력 제고, 민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국방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 인재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국은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민군이 함께하는 바람직한 군 문화 정착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림 1>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자생모델

3. 방위산업구조의 실태 및 문제점

3.1 방위산업구조의 실태

1) 국내 방위산업체의 일반현황

한국 방위산업의 일반적인 현황으로 국내 방위산업체의 수는 198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방위산업체 지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균 80여개 내외로 유지되었으나 2006년 이후부터 중소 방위산업체 위주로 방산업체 지정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월 현재 방산 중소기업은 전체 95개 방위산업체 중 64(67%)개 업체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협력업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 방산산업체 지정현황

(단위:업체 수)

구 분	총계	화력	탄약	기동	항공 유도	함정	통신 전자	화생방	기타
'01	78	11	9	12	7	7	13	2	17
'02	83	12	9	13	9	7	14	2	17
'03	82	12	8	13	10	7	13	2	17
'04	86	12	8	13	12	6	16	2	17
'05	88	13	8	13	11	8	16	2	17
'06	85	12	8	12	13	8	15	2	15
'07	88	13	8	12	15	9	14	2	15
'08	90	13	9	12	15	9	14	3	15
'09	91	13	8	14	15	9	14	3	15
'10	91	13	8	14	16	9	16	3	12
'11	95	13	8	14	17	12	16	3	12

자료: 방위사업청

<표 1>, <표 2>는 방산물자와 업체별 지정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방산물자 지정은 방위사업청장이 산업자원통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방위산업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방산물자는 무기체계 중 지정요건에 충족한 완제품 또는 주요 구성품 (일부 부분품) 단위로 지정하고 있으며, 군의 소요가 없는 등 지정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방산물자에 대하여 매 3년 주기로 방산물자 지정 존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유지 또는 취소 결정을 하고 있다.

무기체계 개발 증가 등으로 방산물자 지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기검토 시행 년도('06년, '11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방위산업체 수는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업체 층이 제한되어 있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방산물자 지정현황

(단위:품목 수)

구분	총계	화력	탄약	기동	항공 유도	함정	통신 전자	화생방	기타
'01	1,136	201	350	155	194	76	111	17	32
'02	1,194	204	351	157	201	99	128	20	34
'03	1,235	192	353	168	237	80	144	26	35
'04	1,324	197	358	171	291	87	148	36	36
'05	1,405	197	359	173	342	110	122	36	66
'06	1,391	175	324	137	432	104	125	34	60
'07	1,423	176	327	138	439	120	127	34	62
'08	1,476	184	331	154	455	135	117	34	66
'09	1,528	187	311	164	486	152	124	35	69
'10	1,543	189	315	154	492	159	129	36	69
'11	1,521	169	292	155	204	164	136	36	65

자료: 방위사업청

2) 국내 방위산업체의 경영실태

국내 방위산업체의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국내 방위산업체의 경영실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안정성 및 활동성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산부분은 '02년부터 시작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산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6.4% 증가한 9조 3,303억 원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방위산업체 평균 가동률은 회사전체 85.9%, 방산부문 59.5%로 제조업 평균 81.2%와 비교해보면 회사전체는 4.7% 높게, 방산부문은 21.7%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방산부문 매출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신규사업 착수, 국내사업의 수요증가, 수출물량 증대 및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증가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방산부문은 최근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증가원인은 매출 증가와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외환차손 감소, 환율변동, 원가절감, 비용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방위산업체의 평균 가동률과 제조평균 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8년간 현격하게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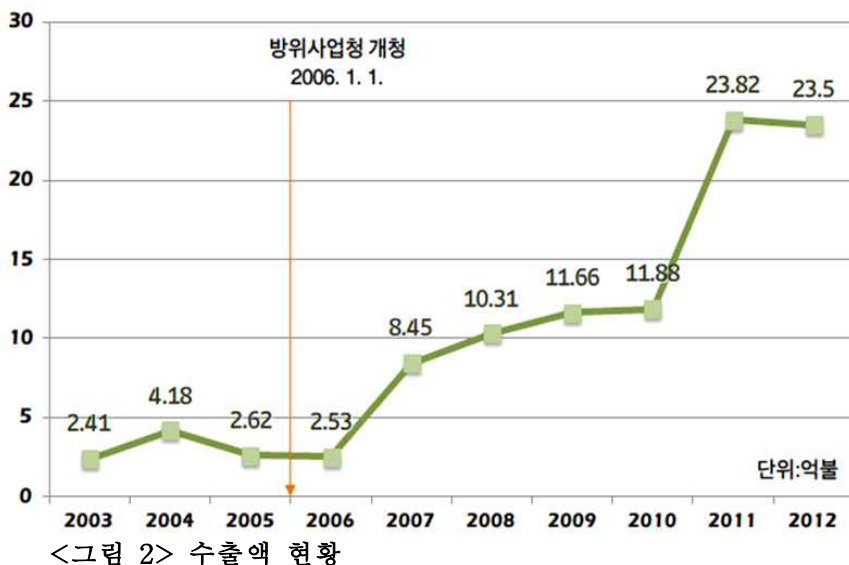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그림 2> 방위산업의 수출액 현황이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방위산업체의 총 매출액은 23.5억불로서 최근 수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을 기점으로 방산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방위산업 수출액은 2006년에는 2.5억 달러였으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3.8억 달러로 2006년 대비 약 9.4배 증가하였다.

<표 3> 방위산업체 경영실태

단위:억원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매출액		43,447	42,681	46,440	53,165	54,517	61,955	72,351	87,692	93,303
영업이익		1,545	1,543	1,413	2,500	2,673	2,629	3,625	5,338	6,898
영업이익률 (%)	방산	3.6	3.6	3.0	4.7	4.9	4.2	5.0	6.1	7.4
	제조평균	6.2	6.7	7.2	6.1	5.3	5.8	5.9	6.1	6.9
가동률 (%)	방산	54.5	57.3	56.1	57.8	61.0	59.8	60.3	61.8	59.5
	제조평균	78.3	78.3	80.3	79.8	81.0	80.3	77.2	74.6	81.2

자료: 방위사업청



기존의 탄약·부품류 등의 수출 위주에서 T-50, 잠수함 등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 첨단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다. 또한, 제품 수출 외에도 미국의 F-15 창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정비·성능개량 서비스 분야로까지 수출형태가 다양화 되었다는 점도 최근 방산수출의 특징이라 하겠다. 기존에

는 탄약류, 부품류 등이 수출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항공기, 함정 및 잠수함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수출 품목이 변화하였다

<표 4> 방산 전력분야별 수출현황

구분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항공		44,028	25,895	9,893	23,780	84,979
탄약		28,805	25,796	23,142	33,376	27,294
기동		3,783	36,066	32,458	8,490	7,174
총포/화력		2,672	10,190	15,907	11,490	1,203
함정		2	92	13,698	36,548	108,223
통신전자		776	1,792	17,073	2,591	5,552
개인장비		3,994	951	4,242	583	2,984
기타		433	2,360	178	1,939	784
총수출액		84,493	103,144	116,592	118,797	238,193

(단위:만 불)

자료: 방위사업청

방산 전력 분야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함정과 항공 분야의 방산수출이 크게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³⁾ 방산수출의 권역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1년 기준 총 수출액 23.8억불 중 아시아가 15.6억불로 전체의 66%정도를 차지한다.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시아와 북미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방산수출의 잠재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군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인민해방군 산하 방위산업업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 방산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가능한 국가이다(홍성표 2007).

국내 방위산업 환경은 국방개혁 2020을 통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 2020 개혁과제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① 연구개발비를 2012년까지 국방비의 10%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증액하고, ②

3) 방산 전력 분야별 수출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방위사업청 2012).

- 항공분야 : 훈련기, 항공기 엔진 등 수출 중이며, T-50 훈련기 수출 추진 중
- 탄약분야 : 전통적인 수출 주력분야로서 미국중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 기동분야 : 전차, 장갑차, 군용차량 등 20여개 국가에 수출 지속
- 총포/화력분야 : 자주포, 견인포, 화기류 등 다양한 품목으로 수출 지속
- 함정분야 : 함정 및 잠수함 등의 제작·정비사업 등 수출영역 확대
- 통신전자 : 통신장비 및 무기 관련 전자장비/부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
- 개인장비 : 화생방 장비, 낙하산, 방탄장비 등 소형장비의 수출 증가

국방과학연구소를 핵심기술 및 전략무기 개발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방개혁 2020 기간 동안 총 국방비 규모 621조 3천억 원⁴⁾, 방위력 개선비 규모 272조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0년까지의 국방연구개발비 35.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8년 국방비 대비 28% 수준의 방위력 개선비는 2020년경에는 국방비 대비 45%대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연구개발비는 국방비 대비 6~7%정도로 예상된다(국방부 2006).

<표 5> 권역별 수출현황

구분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북미		21,056	33,237	40,139	48,715	64,055
유럽		1,554	817	7,589	3,590	2,978
중동		42,385	44,634	37,707	11,630	10,948
아프리카		67	12,721	1,180	5,078	1,960
아시아		18,536	9,190	29,003	48,353	156,574
중남미		896	2,534	928	1,430	1,534
러시아/CIS		0	11	45	1	144
총수출액		84,493	103,144	116,592	118,797	238,193

(단위:만 불)

자료: 방위사업청

3.2 방위산업의 문제점

1) 취약한 방위산업의 기반

방위산업의 실태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며, 특히 방산중소기업의 실상은 대기업에 비해 더욱 취약하다. 1970년 이후 제조능력 성장에도 불구하고 종합생산기반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조립생산 중심의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핵심부품을 해외도입에 의존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취약한 하부 공급기반의 문제점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소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에 의해 체계조립 위주로 운영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정호·안영수·장원준 2012).

4) 동일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정부재정규모 3,700조원의 16.8% 수준임

일부 공급자에 의한 시장의 독과점 현상은 1990년 이후 대규모의 방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행된 이후에 공급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갖는 시장지배력은 진입장벽으로부터 형성되는데 특히 무기시장은 정부에 의해 방위산업의 기반 유지라는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서나 업체 주도로 무기를 개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 특히 새로운 시장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2) 방위산업체의 경영 악화

2012년 2월 방산 중소기업은 전체 95개 방위산업체 중 64개 업체(67%)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협력업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용인원 비율은 20%, 매출액 비중은 10%에 불과하며 업체 가동률도 63%로 제조업 평균 81%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회사전체 대비 매출액 비율이 7.5%에 불과하고 수출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8).

일반 제조업에 비해 매출액 영업이익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및 1인당 매출액, 가동률 등 경영성과 지표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방산물자의 국산화율은 72.2%에 불과하여 첨단무기의 해외구매 및 기술도입 생산을 불가피하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방위산업체의 경영의 악화는 국가재정 투자의 시각에서 볼 때 방위산업 재정운용의 고비용화 문제를 낳게 된다. 국가가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군사력건설 지원과 전시대비 전투지속능력 보장이므로 방위산업 정책의 목표는 자주적 군사력건설 지원과 경제적 방위산업 유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방위산업 재정지출의 목적은 자주적 군사력건설 지원과 경제적 방위산업육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3) 과도한 경쟁

과도한 경쟁은 무기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 시장경제 원칙의 대표적 저해 요인이 되는 독과점 현상은 일부 특수한 무기에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미 개발된 민간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되는 무기나 군용 기술이 민수용 기술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수시장과 군수시장 또는 민수생산시설과 군수생산시설의 부분적 공유가 가능하며 완성장비가 아닌 부품이나 구성품 시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무기체계그룹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 군용 항공기 산업을 들 수 있다(조관식 2012).

항공우주산업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군수산업을 주도한 대표적인 산업 분야이며 어느 나라이든 국가 정책적·산업 전략적 관점에서 대규모의 투자와 철저한 생산기반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분야이다. 항공우주산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치열한 경쟁시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때때로 일부 참여자의 공격적인 저가 책정으로 인하여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4) 내수의존의 한계

2009년 기준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은 15%이다. 방위산업에서 국제 공동 개발 및 합작 등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가 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정부의 방산수요 창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핵심부품에 대한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하여 수출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선진국들은 첨단 핵심기술의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산수출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요인 중의 하나는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소유여부인데 결국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을 통제함으로써 국제방산시장에서 지속적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산수출국들은 자국의 기술 보호와 이전에 대한 통제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위산업 및 국방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갈등관리방안으로는 ① 국방연구개발 예산 지속적 확대 및 기술개발 중점 배분, ② 미래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NCW)을 고려한 전략적 육성분야 투자 확대, ③ 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 개정을 통한 국방중심의 범부처 협력사업 추진, ④ 특화연구센터 및 핵심기술개발에 산·학·연 참여 확대, ⑤ 국방 R&D를 위한 민·군 기술교류 확대, ⑥ 국제기술협력 및 공동개발 활성화를 통한 방산수출 기반 마련, ⑦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지원 방안 마련 등이 방위사업청의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으로 제시되고 있다(방위사업청 2009).

4.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4.1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전제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나 정책을 수립하면서 방위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방위산업 내에 존재하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는 일방적 지원 또는 산업보호보다 궁극적으로 방위산업체 스스로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자발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모델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민주성 확보, 방위산업체의 참여역량과 사회자본 형성, 체제의 개방성과 수용성, 민관 역할 및 협력관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과정의 민주성이다. 조직 내·외부의 민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적 리더십, 분권화, 자율성 등을 일컫는다. 최고정책결정자는 부하직원들의 정책과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회의에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대안을 청취하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의지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부조직 이외의 민주성은 민간단체 또는 시민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방위사업청의 역할 일부를 위임 하는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관심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참여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이다. 거버넌스 공간에서 사회자본의 형성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해 준다. 사회자본의 기본요소가 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구축이 형성되어야 비판적 차원을 넘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민관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대전·충청권 통합 방위산업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인적·물적자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전·충청권의 국방산업 분야의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민과 군 그리고 산과 학·연이 서로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혁신역량과 지역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것이다.

셋째, 방위사업청의 역할 전환이다. 무엇보다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체와의 유착 고리 근절을 위해 인사·보직관리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고 원가·계약 업무의 절차 개선을 통한 투명성으로 확보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제대 기준·절차의 명료화로 방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관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역할분담을 해주는 조정자, 후원자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4.2 지역 경쟁력을 위한 방산 거버넌스의 추진방향

지역의 경쟁력을 위한 방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추진체의 정립을 통해 방위산업 중심의 지원체도를 개선하고, 국방과학기술 R&D 육성을 위한 지역협력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체의 기술력 발휘를 위한 관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1) 민·관·군·연·산 정책협의체

방산 거버넌스 중심축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면서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자로서 방산 육성을 위한 민·관·군·연·산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국방과학기술과 방산 육성을 위한 복합적 협력체제로서 거버넌스 내의 행정협의체를 의미한다. 방위산업을 보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 있는 방산 육성전략이 미흡하고 단순한 수출증대를 위한 조직편성 등 임시적인 해결책들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채우석·길병옥 2009).

따라서 가칭 ‘방산육성추진단’을 형성하여 미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처(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나 일본의 방위청기술연구본부(Technical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of JDA: TRDI)등과 같은 전담 행정지원체계를 통해 방위산업의 메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전·충청권의 방산과학기술분야를 특화 전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국방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협의체는 방산산업단지와 국방물류기지를 조성하고 해당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산업체, 국방물류산업체를 포함하여 생산사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자금 지원 및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행정협의체는 국방산업에 관한 군수규정, 군사보안, 기술획득절차, 물자획득절차, 조달물자정보 등

관련 규정 및 정보제공, 군의 물류획득방식 및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대한 교육, 국방관련 행정정보 전산화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지역협력연구센터 구축

과학기술 혁신거점 육성으로 지역협력연구센터의 구축이다. 이는 대전·충청권의 특화 기술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고가정비의 활용증대로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를 추구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방위산업육성 측면을 보면 지난 20-30여 년간 나름대로의 경험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국산화를 해왔지만 핵심 기술개발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산화한 제품에 대해 장기간 소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촉진정책이 미약했고 무엇보다도 국산화를 위한 정부·연구기관·방위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했다(이관률 2008).

국방 R&D 투자의 중요성은 자주국방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핵심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것과 우수한 국방산업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군수용 사회 인프라와 첨단기술이 민수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생산업체로서는 그만큼 초기개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공계의 우수인력 충원이 필요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방위산업과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우지 않는다면 첨단무기의 해외도입에 치중하게 되고 결국 해외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 협력적 자주국방의 구현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무기체계의 국산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방 R&D 육성과 방위산업 육성은 결국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종속화를 탈피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산업 관련 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민수부분의 기술투자를 최대한 유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특히 전략적인 연구 분야를 선정하여 민군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기술 이전 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장명언 2006).

3) 지역의 인재 육성

대전·충청권의 방위산업 거버넌스 구축방에 따른 방위산업 인재 육성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이 지역은 한국 최대의 방위산업 관련시설 집적지로서 국방관련기관으로 3군본부, 육군훈련소, 자운대, 육군군수사령부, 종합군수학교, 제17전투비행단 등이 위치해 있고 연구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공군사관학교, 육군항공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해·공구대학, 군사학 관련 지역대학 등 대거 밀집되어 있다.

통신·전자장비, 탄약, 항공유도 등 첨단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년 방위산업체 수와 전체 매출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로서 인재양성의 필요성 및 필요인력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위산업은 민간기술과의 상호교류·보완과정이 필수적이며 분야별로 융·복합 기술형태를 띠는 특성으로 전략적인 산업연계 지식·정보화, 기술 및 인적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긴요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4) e-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마지막으로 e-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e-거버넌스는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에 기초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거버넌스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e-정부(E-government)의 진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e-거버넌스를 “정부, 비영리조직, 민간부문 단위(entities)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e-거버넌스는 정부 업무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 NGO, 주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킨다. e-정부와 똑같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나 몇 가지 점에서 구분된다. 먼저 전산시스템의 발전 형태인 e-정부보다 더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 개념으로, e-정부가 정부 업무 온라인 처리 중심의 인터넷 시스템이라면, e-거버넌스는 정책결정과 집행,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관련 정보공개, 토론, 의견의 제출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의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시스템 중심으로 주민, NGO, 기업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e-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구축은 방위산업의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거버넌스 네트워크는 대전·충청권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부문에 대한 홍보와 관·군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고용과 계약에 관한 정보, 연구기관의 R&D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정보 등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방위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전·충청권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대전·충청권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은 새로운 과학문화의 지평을 열어 가는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민군융합공간의 구축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하여 과거와는 달리 획기적인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 R&D 육성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민·관·군·산·연이 각자의 독자적인 기능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거버넌스하의 서로간 협력·연계 노력을 통해 고유의 능력 향상은 물론 통합과 화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통합적으로 창출하는 협력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로서 지역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방위산업청의 역할전환이다. 방위산업청은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체와의 유착 고리 근절을 위해 인사·보직관리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고 원가·계약 업무의 절차 개선을 통한 투명성으로 확보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제대 기준·절차의 명료화로 방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국방비를 감축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13년부터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4천5백억 달러를 감축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축소 규모를 6,000억 달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방산 선진국은 국방 연구개발(R&D)로 특정 분야를 선택해 집중 투자하는 등 방산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선진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정상의 외교적 노력 확대와 전담 수출지원 조직 운영 등 수출지원체계를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체 간 인수합병(M&A)으로 대형 방위산업체가 탄생하고,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추진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선진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다른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가지므로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에서 나타나는 관련된 현상 또는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나 정책을 수립하면서 방위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방위산업 내에 존재하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동시에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위산업의 내수 의존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산수출은 한번 성사되면 20-30년 이상 부품 및 정비 등 후속군수지원 수요를 유발해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일방적 지원 또는 산업보호 보다는 궁극적으로 방위산업체 스스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자발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경쟁 촉진과 수출산업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정책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방위산업을 국내 제조업과 연계시켜 민·군 겸용 및 상호협력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국방비』, 서울 :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2006.
- [2] 국방부, 『국방백서』, 2006.
- [3] 길병옥·최병학, “국방과학기술 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국방정책연구』 제 76호, 2007.
- [4] 김정호·안영수·장원준, “방위산업 특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경제』 .2012. 5.
- [4] 김종하, “한국 방위산업의 연구개발수행력에 따른 구조혁신의 방향,” 『한국방위산업 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0.
- [6]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연구』 2011.
- [7] 방위사업청,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8.
- [8] 조관식, “선진 방산시스템의 추세 분석 및 한국 방산 발전 방안,” 방산정책심포지엄, 2012.
- [9] 양용석, “방위산업 수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기술사업화 및 기술료 산정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60호. 2009.
- [10] 이관률,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충남리포트』 충남발전연구원, 2008.
- [11] 이호석·남기현, “방위산업 선진화: 의미와 과제,”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4호. 2011.
- [12] 장명언, “국방과학연구소의 현황 및 발전방향,” 『국방과학기술 플러스』, 2006.
- [13] 채우석·길병옥, “우리나라 방산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방위산업 학회보』 제16권 제2호. 2009.
- [14]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8 방위산업체 경영분석』, 2008.
- [15] 한국산업개발원, 『방위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다양화 방안』, 2011.
- [16] 홍성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방안,”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제4권 2호, 2007.
- [17] HCP. *The Defense Implications of the Future to Westland plc*, Defence Committee, House of Common Paper, HMSO, London. 1986.
- [18] Kennis, P&V. Schneider, "Political Networks and Policy Analysis: Scrutinizing a New Analytical Analysis." In B. Marin & R. Mayntz(eds.), *Policy Networks: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Campus Verlag; Westview Press. 1991.
- [19] Kooiman, J. "Governance: A Social-Political Perspective." In Jurgen R. Grote & Bernard Gbikpe(eds.), *Participatory Governance: Political and Societal Implications*, Opladen, 2002.
- [20] Kooiman J. and Van M. Vliet. "Governance and Public Management." in K. A. Eliassen and J. Kooiman(eds.), *Managing Public Organization*, London: Sage Publisher, 1993.